

2012

DIPLOMATIC

WHITE

PAPER





제 5 장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제1절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186
제2절 개발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 실천.....	211
제3절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228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238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1. 유엔과의 관계 강화

2011년은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해였다. 20주년을 기념하여 7월 12일 서울에서 「유엔가입 2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비제이 남비아르(Vijay Nambiar) 유엔사무총장 비서실장(유엔사무차장), 최영진 유엔사무총장 코트 디부아르 특별대표(유엔사무차장) 등 유엔 인사가 참석하여 “유엔외교 20년 결산 및 과제”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2011년 6월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재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6월 17일 안보리회의에서 연임추천결의(임기: 2012.1.1-2016.12.31)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6월 21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안보리 15개국 이사국 및 5개 지역그룹 의장국의 공동제안으로 재선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총회에 참석, 반기문 사무총장의 재선을 축하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9월 21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국제평화와 안보, 민주주의와 인권, 빈곤퇴치와 개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을 주제로 연설하였고, 9월 22일에는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알 나세르(Al-Nasser) 제66차 유엔총회의장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방한하였다. 나세르 총회의장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유엔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 총회고위급회의(UNCDD)에 참석하여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유엔총회활동, 유엔 개혁 등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방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글로벌모의유엔회의(GMUN)개막식에 참석하였고, 11월 30일에는 부산개발원조총회 개막식에서 축사하였다.

2. 국제기구 진출

우리나라는 2011년에도 주요 국제기구 의사결정기관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FPA) 집행이사국(2012-14년 임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2011-13년 임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집행이사국(2011-15년 임기), 유엔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UNSCER) 신규위원국,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2011-13년 임기)에 진출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우리 국민의 유엔 체제내 고위직 진출도 활발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재선을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고, 젊은 세대들의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박해윤 분담금위원회(CoC) 위원이 재선되었으며, 한비야 구호활동가가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자문위원(2011-2014년 임기)으로 임명되었다. 국제사회의 인도 지원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과 기여 확대 노력을 유엔 측이 높이 평가한 결과로 사료된다.

박기갑 교수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2012-16년 임기)으로 선출되었으며, 박선기 변호사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국제형사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창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김종안 전 특허청 심판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상표진흥국장에 임명되는 등 고위직 진출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3.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규모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능력과 자질, 국제 감각을 갖춘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2011년 3월 「국제기구인사센터」(외교부 청사 1층)를 개소하여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초청 간담회 개최, 이메일·전화·방문 상담기능 강화, 국제기구 근무 한국인 멘토와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북 발간,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제도 시행, 유엔사무국 국별경쟁시험(YPP: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Recruitment Examination)유치,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초청 간담회」를 총 9차례 개최(약 1,000여명 이상의 학생과 직장인 참석)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91년 유엔가입 당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우리국민의 수가 17개 기구에 139명 수준이었으나, 2011년 12월에는 49개 기구에 398명에 달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2011년 외교통상부는 유엔사무국,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노동기구(ILO)의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제4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Job Fair for Career Opportunities in the UN System)」를 2011년 5월30일 전북대, 2011년 5월 31일 경북대, 2011년 6월 2일 이화여대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전국 100여개 이상 대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1,200여명(서울, 지방)이 참석하여 각 기구별 채용정보를 자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밖에도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은 방한 계기 경력자 추가세션을 외교통상부와 연세대학교에서 2차례 시행하여 경력직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6년 이래 평균 5명 수준으로 파견해오던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를 2011년에는 3배 확대하여 15명을 파견하여, 유능한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확대하였다.

»» 고위직 진출 현황

직위 구분	국제기구
이사 / 위원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 대륙봉한계위원회, 유엔분담금위원회,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세계기상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유엔 산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국제민간항공기구, 유엔중앙급대응기금, 국제법위원회, 경제협력 개발기구 원자력기구 운영위원회, 유엔인간정주계획 상주대표 위원회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 유고국제전범재판소, 르완다국제전범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
기타 사무국고위직	유엔인권차석대표(사무차장보급), 유엔사무총장비서실차장(사무차장보급), 유엔정보통신 기술사무차장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태지역 사무소장, 식량농업기구(FAO) 방콕 사무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WHO 태평양기술지원국장 및 남태평양사무소 대표, 유엔인도지원실 국장, UNESCO 현장조정국 부국장, 국제원자력기구(AEA) 원자력발전국장, IAEA 방사선수동폐기물 안정국장, 국제해사기구(IMO) 예산부국장,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아태지역 사무소장, 유엔환경계획(UNEP) 아태지역 사무소장, 아태 지역정보통신기술센터(APCICT: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소장, ESCAP 교통국장, ESCAP 환경개발국장

 유엔사무국 국별경쟁시험(YPP)

- 유엔에서 근무하는 정식 직원수(지리적 배분원칙이 적용되는 직위에 한함)가 재정분담금 규모 등에 비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을 채용하기 위해 해당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 2011년부터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이 유엔사무국 국별경쟁시험(YPP)으로 대체하여 실시
- 우리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을 14차례 유치하여, 그간 우리 국민이 63명 합격하였으며, 그 중 44명이 임용되는 등 국민의 유엔사무국 진출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
- 2011년 12월 7일 시행된 유엔사무국 국별경쟁시험에 행정, 통계, 공보, 인도적 지원부분에 90여명 정도 응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 우리 정부의 비용 부담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1-2년간 수습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규 직원 자격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 1996년 이래 2011년 말까지 88명의 JPO를 선발하여 UN, WFP, WHO, UNDP, UNV, UNEP, UNICEF, UNFCCC, UNODC, UNIFEM, UNCDF, ILO 등 주요 국제기구에 파견
- 2011년말 현재, 파견기간이 만료된 JPO 63명중 총 51명이 해당 국제기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www.UNrecruit.go.kr)

국제기구 인사센터 트위터(<http://twitter.com/mofatUNrecruit>)

국제기구 인사센터 페이스북(<http://facebook.com/UNrecruit>)

연중 수시로 국제기구 공식 정보 및 국제기구 진출 관련 세미나, 간담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의 충실도를 높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진출 인프라 구축

4.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은 적대행위가 종식되어 평화회복 과정에 있는 국가에 정전 감시, 무장 해제, 분쟁 재발 방지, 치안 유지, 전후 복구활동 등을 제공하는 유엔주도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활동이다. 그 규모와 임무가



| 레바논군 연합 도보정찰

계속 확대되어 201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9만8천명의 군·경과 민간인 2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연간 예산도 유엔 정규예산의 3배 이상인 78억 달러규모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대한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10대 기여국이며, 인적 참여에 있어서는 116개 PKO 파병 국가중 33위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1993년 소말리아에 250여명의 공병대대(상록수부대)를 파견한 이래 총 17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으며, 레바논(UNIFIL)에 359명 규모의 동명부대 및 아이티(MINUSTAH)에 240명 규모의 단비부대 등 총 10개 평화유지활동임무단에 640명을 파견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동명부대 및 단비부대 파견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하는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평화·안보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 장병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인 민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적

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른 파병국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2010)에 따라 설치된 유엔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를 2011년 6월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엔 PKO 참여현황을 점검하고, 국제평화 기여를 위한 유엔 PKO 참여정책 전반에 관해 유관 부처들이 협의하였다.

》》 파견 현황

(2011년 12월 현재)

국가 (지역)		임무	규모	최초 파견
레바논 (UNIFIL)	동명부대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군 359명 (보병)	2007.7
	사령부		참모장교 5명	2007.1
			서부여단 참모 5명	2008.3
아이티 (MINUSTAH)	단비부대	치안유지 및 아이티 지진	군 240명 (공병)	2010.2
	사령부	피해 복구 및 재건 지원	참모장교 2명	2009.11
인도·파키스탄(UNMOGIP)		카시미르지역 정전 감시	군읍저버 8명	1994.11
라이베리아(UNMIL)		정전감시	군읍저버 1명 참모장교 1명	2003.10
남수단(UNMISS)		정전감시	군읍저버 6명	2011.7
아베이(UNISFA)		정전감시	참모장교 1명	2011.7
수단다푸르(UNAMID)		평화협정 이행 지원	군읍저버 2명	2009.6
동티모르(UNMIT)		치안유지	경찰 4명	2006.12
코트디부아르(UNOCI)		정전감시	군읍저버 2명	2009.7
서부사하라(MINURSO)		평화협정 이행 지원	군읍저버 4명	2009.7
총 계			640명	

5. 인권 · 민주주의 증진에의 기여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활동

인권이사회는 2011년 3월, 6월, 9월의 정기회기와 리비아 사태에 관한 1회의 특별회기 및 시리아 사태에 대한 3회의 특별회기를 개최하였다. 인권이사회는 2010년에 이어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였다. 동 이사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에 우리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하였다(찬성 30, 반대 3, 기권 11). 리비아 사태와 관련하여 리비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를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결정함으로써, 자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없게 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는 3차례의 특별회기 개최를 통해 사실조사단 및 국제조사위원회 파견을 결정함으로써 시리아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대처의지를 결집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유엔회원국 인권상황을 개별 심의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실시하여, 2011년중 49개 유엔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인권이사회 창설시 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2008년 재선되어 2011년 6월 제17차 이사회까지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또한 인권이사회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선하고, 전세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2013-15년 임기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4년마다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활동

2) 유엔총회에서의 활동

2011년 제66차 유엔 총회 기간 중에 인권·사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는 2011년 봄 이후 중동사태와 관련하여 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민주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함께 시리아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팔레스타인에서의 인권침해, 발전권 등이 논의되었다.

북한인권결의는 유엔총회에서 2005년 이래 매년 표결로 채택되어 왔으며, 특히 2011년에는 3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채택되었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 찬성국은 증가(9개국 증가), 반대국과 기권국은 각각 감소(2개국, 5개국 감소)한 것으로서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2010년에 이어 동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하였다.

3)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주요 모델국가로서, 글로벌 아젠다인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기여 노력은 세계차원에서 민주주의 공동체(CD: Community of Democracies) 참여, 지역차원에서 아·태 민주주의 협력체(APDP: Asia 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주도 및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여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동체(CD) 공동주도국(Convening Group)의 일원으로 2002년 11월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의 서울 유치 이후,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특히 2011년 제 6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개편안에 따라 공동주도국이 분리, 확대될 운영이사회(governing Council) 및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이사국이자 위원국으로서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는 민주주의 공동체의 6개 실무그룹의 하나인 지역협력 실무그룹(W/G on Regional Cooperation)의 공동의장을 루마니아와 함께 수임하여 2011년 4월 ‘민주주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제4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는 민동석 제2차관이 참석하여 우리의 민주주의 관련 경험을 여타국가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역협력체간 상호보완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 CD(Community of Democracies)

- 민주주의 확산 및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위해 1999년 창설된 범세계적 민주주의 협력체

- APDP(Asia-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 아·태지역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2008년 창설된 지역협력체로서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며,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거감시단 파견, 선거관련 능력배양 등 추진

- 발리민주주의 포럼

-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민주주의 관련 경험과 모범관행 공유를 목적으로 2008년 창설한 고위급 지역협력 포럼

4) 취약계층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외교적 활동

우리나라는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인권증진 경험과 대응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적인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2011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55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수석대표: 여성부장관)하여, 우리 정부의 선진 여성 정책을 홍보하고, 국제적인 여성지위 향상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는 바, 여성 인권분야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2011년에 출범한 유엔여성통합기구(UN Women) 초대 집행이사국으로서 양성 평등 및 여성권한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특히 UN Women내 우리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 2012년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임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Fund for Children)의 집행이사국으로서 2011년 UNICEF 집행이사회 및 제8차 한-UNICEF 양자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도 강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당사국으로서 2011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장애인의 점차적 참여, 경제적 역량 강화, 차별철폐 등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난민보호를 위한 국내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10월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난민기구(UHCHR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집행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2월 난민협약 60주년 및 무국적감소협약 50주년 기념 장관급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하여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난민법 제정 등 우리정부의 난민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서약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명간 연대(Alliance of Civilizations)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5월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국가이행계획’ 작성을 완료하여, 문명간 연대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또한 제4차 문명간 연대 포럼이 2011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어 ‘문화적 다양성과 개발

간 연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와 관용’, ‘문화간 대화와 이해,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우리 정부에서는 백지아 국제기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하여 문명간 연대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6.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 WMD 관련 군축 · 비확산 활동

국제사회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위협 증대에 따라 핵비확산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등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있다. 특히, 2000년 NPT 평가회의 이후 10년 만에 최종 결과문서가 채택된 2010년 평가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12년 4월에 NPT 준비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바, 국제사회는 NPT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NPT 체제를 강화하는 모멘텀을 지속시켜 나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NPT 평가회의시 부의장을 수행하는 등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단호히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은 강화되어 가고 있다.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2011.9.22, 유엔 총회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연설을 통해 우리의 원전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핵테러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2010년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고, 47개 참가국 및 국제기구 정



| 이명박 대통령, 2011년도 유엔 원자력 안전 고위급회의에서 기초연설 시행

상들이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함으로써,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되었다. 2012년 3월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안보분야 최대 규모, 최고위급 정상회의로서, 53개국 및 4개 국제기구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0년 11월 설립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2011년 3월 발족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외교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의장국으로서 지난 워싱턴 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주도하는 한편, 핵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2011년에는 두 차례의 부교섭대표회의(3월 비엔나, 6월 서울) 및 교섭대표회의(10월 헬싱키)를 주재하여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으로 채택될 예정인 ‘서울 코뮤니케’ 문안 교섭 과정을 주도하였다.



의장국으로서 헬싱키 교섭대표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학계·산업계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동참할 수 있는 채널도 활발히 운영중이다. 예를 들어, 행사지원요원 선발, 로고·슬로건·에세이 등 각종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의 취지를 살려 나가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 직전에 부대행사2012 서울 원자력 인터스트리 서밋(3.23-24), 2012 서울 핵안보심포지움(3.23)를 개최하여 세계 원자력 산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의 핵안보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 위촉식

한편 NPT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이란 핵문제는 6자회담과 E3+3(영·불·독+미·러·중)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8일 20% 농축 우라늄 생산을 3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IAEA 이사회는 2011년 11월 18일 이란 핵프로그램이 군사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s)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이 IAEA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¹⁾를 채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 EU,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11일 이란의 105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였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0년에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를 채택·공개²⁾하였는데 반해 2011년에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당해 연례보고서가 안보리에서 계류되고 있다. 이란 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 역시 안보리에 계류 중이다.

다만, 북한제재위는 2011년 12월 5일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1874호상 의무 사항인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 이행을 돕기 위해 사치품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행안내문(IAN: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을 채택하고, 이를 북한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대북 사치품 금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세계적 우려를 적극 표명하여, 2011년도 제55차 IAEA 총회 북핵 결의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총회 언론발표문, 원자력공급그룹(NSG) 총회 대외발표문 등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국제무대에 적극 개진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55차 IAEA 총회(9.19-23, 비엔나)에서 지역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2009-11년 이사국 활동에 이어 2011-13년에도 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AEA 출범 이후 총 14회 이사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또한 우방국 및

1) IAEA 이사회 결의 요지 :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명, △이란과 IAEA 사무국간 대화 강화 강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지속적 지지, △이란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E3+3와의 대화에 참여토록 촉구

2) S/2010/571(2010.11.5)

»»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안보리 결의 1718호(2006.10.14)	안보리 결의 1814호(2009.6.12)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CA)상 7대 무기류, 관련물자, 부품 • NSG, MTCR, AG 통제품목 • 여타 안보리 또는 제재위 지정 WMD·미사일 관련 품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대외수출 금지(op.9) •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소형무기 제외) 및 관련물자 이전·수출 금지(op.10)
화물 검색	<p>자국 법령 및 국제법에 따라 1718호에 따른 금지 물품(대부분 상기 금수 무기, 특히 WMD·미사일 관련 물자)을 적재한 북한행·발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조조치(cooperative action) 제공(op. 8(f))</p>	<p>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 국제법에 따라 항구 및 공항 등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발 화물 검색(op.11)</p>
금융·경제 제재	<p>WMD·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안보리 또는 제재위가 지정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자금·여타 금융자산 및 자원 동결 및 이전 금지(op. 8(d))</p>	<p>WMD·미사일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자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op. 18)</p>

IAEA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9월 이사회(9.12-16, 비엔나) 및 총회에 북핵 관련 IAEA 사무총장 종합보고서가 제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제출된 북핵 관련 IAEA 보고서는 IAEA 홈페이지에 등재됨으로써 대외에 공개되며 북핵 문제의 발단부터 현재까지를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IAEA에서도 원자력 안전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3월 21일에 특별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6월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각료회의(6.20-24, 비엔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IAEA 차원의 노력은 9월 총회에서 IAEA 원자력 안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성과를 낳았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이후 회원국으로서 최초로 2011년 7월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를 수검하고, IAEA의 후쿠시마 사고 지원 활동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IAEA에서의 원자력 안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관련, CD는 군축 분야 핵심적인 논의의 장으로서 1990년대 초반까지 NPT, BWC 등 주요 다자 군축조약이 성안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1996년 CTBT 채택 이후 10년 이상 CD 4대 주요 의제³⁾에 대한 협상 개시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으로 작업계획 채택이 실패하여 공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CD 활성화 및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의 협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2011년도 CD 본회의시 기초연설을 통해

▶▶ IAEA 이사국 현황

(2012년 2월 현재)

구 분		국가명	지역 구분
지명이사국(13개국) (2012.6월까지)		미국, 캐나다	북미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서유럽
		러시아	동유럽
		중국, 일본	극동
		호주	동남아·태평양
		인도	중동·남아시아
		아르헨티나	중남미
		남아공	아프리카
선출이사국 (22개국)	2010년 선출 (2012.9월까지)	포르투갈, 벨기에	서유럽
		체코	동유럽
		싱가포르	동남아·태평양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합	중동·남아시아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중남미
		니제르, 튀니지	아프리카
	2011년 선출 (2013.9월까지)	이태리, 스웨덴	서유럽
		불가리아, 헝가리	동유럽
		한국	극동
		인도네시아	동남아·태평양
		사우디	중동·남아시아
		쿠바, 멕시코	중남미
		이집트, 탄자니아	아프리카

3) CD 4대 주요의제는 ①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②외기권에서의 군비경쟁방지 (PAROS: Prevention of Arms Race in Outer Space) ③핵군축(ND: Nuclear Disarmament) ④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다.

FMCT 협상의 조속 개시를 당부하는 등 CD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⁴⁾의 이행과 관련, 현재 미국, 러시아, 리비아가 폐기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1년도 당사국총회에서 △화학무기보유국의 폐기시한 문제, △산업사찰 횟수, △10년 경과 전환시설 검증지침 마련 등, 협약 검증 문제가 다수 해소됨에 따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⁵⁾의 미래 우선순위(future priorities) 문제가 금년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1-2013년 임기의 OPCW 집행이사국으로서 OPCW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⁶⁾과 관련, 2011년도 개최된 제7차 BWC 평가회의에서 회기간 프로세스 설정, 임시사무국(ISU: Implementation Support Unit)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문서가 채택되어 향후 BWC 협약 이행 점검과 강화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리 정부는 동 회의에서 '이중용도 생물물질·기술에 대한 생명과학자 교육·인식 제고' 제하 유사입장그룹인 JACKSNNZ⁷⁾명의 작업문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 활동 전개하였다. 한편, 제7차 평가회의에서는 BWC 협약 이행검증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메커니즘 구축을 주장하는 비동맹 국가와 자발적인 신뢰구축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방그룹간 이견이 노정되어 관련 논의는 진전없이 종료되는 한계를 보였다.

4) 동 협약의 정식 명칭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이다.

5) CWC 제8조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서, 동 협약 발효 직후인 1997년 5월 헤이그에서 설립되었다. OPCW는 CWC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 검증체제를 포함하여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며, 당사국간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

6) 동 협약의 정식 명칭은 「세균(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이다.

7) JACKSNNZ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을 일컫는 약어로, 우리나라 외 일본,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국가 그룹이다.

2)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가간 공조 참여

우리나라는 WMD 및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⁸⁾에 정식 참여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에는 우리 주최로 PSI 워크숍 및 해상 차단훈련(Eastern Endeavor)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PSI 주도국 모임인 운영전문가그룹(OEG: Operational Experts Group)에 정식 가입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향후에도 PSI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GP: Global Partnership)⁹⁾참가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

》》》 PSI 참여국 현황

(2012년 2월 현재)

지역	참여국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피지, 일본, 마셜군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사모아, 바누아투, 한국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국)	앙골라, 바레인, 지부티,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오만, 카타르, 튀니지, 이란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예멘, 라이베리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유럽·구소련지역 (53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미주지역 (13개국)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칠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미국, 콜롬비아, 안티가바부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8) PSI란 WMD 확산 우려국가 및 집단의 WMD 및 미사일, 관련 장비·물자·기술의 불법이전을 막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조 체제이다. 2003.5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98개국이 공식 참여중이다.

9) G-8 GP는 9.11 테러 이후 핵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구소련 지역의 WMD를 관리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간 조정 및 국제적 자원 확보 필요성에 따라 2002년 6월 G-8 정상회의에서 창설되었다.

어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스탄 핵밀수 방지사업, 아프가니스탄 생물안보(biosecurity) 강화 사업 및 중동지역 핵안보(nuclear security) 관련 워크숍 개최사업에 대한 기여를 계속하는 등, GP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WMD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GP 참여는 WMD 비확산 분야에서 우리의 신뢰도 및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GP에서는 금년도 의장국인 미국의 주도 하에 △참여국 확대를 통한 GP 보편성 확대, △생물안보 분야 기여 강화, △프로젝트 조율 등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는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¹⁰⁾에 활발히 참여해 왔으며, 특히 2011년 제7차 GICNT 회원국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6월 29일-30일간 개최된 총회에는 전체 82개 회원국 중 60개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핵테러 방지 및 핵안보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동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2009년 PSI 정식참여 및 금년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3) 재래식무기 분야에서의 활동

대인지뢰 및 확산탄 규제 논의와 관련, 대인지뢰금지협약(Convention on Anti-Personnel Mines)¹¹⁾과 확산탄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¹²⁾이 각각 1999년 3월과 2010년 8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상 대인지뢰와 확산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상기 협약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인명살상을 초래하는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인도적 피해 경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매년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해 지뢰제거사업 지원금을 납부하고 특

10) 2006년 7월 미·러 양국은 핵 물질의 불법거래 탐지능력 강화와 정보 교환 촉진에 중점을 둔 국제 협력체제로서 세계핵테러방지 구상을 발표하였고, 동년 11월 13개 원화원국과 IAEA(옴저버)의 GICNT 원칙선언(SOP: Statement of Principles) 채택을 통해 공식 출범하였다.(우리나라는 2007년 5월 가입) 동 구상은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닌 자발적 성격의 국제적 협력체이다.

11) 대인지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their Destruction, 일명 오타와 협약)은 1997년 9월 체결되어 1999년 3월 발효되었다.(2012년 2월 현재 당사국 159개국)

12) 동 협약은 노르웨이의 주도로 시작된 협약으로(일명, 오슬로 프로세스), 원칙적으로 모든 확산탄의 사용, 개발, 생산, 획득, 비축, 보유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 2월 16일 부르키나 파소와 몰도바가 유엔에 동 협약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 발효를 위한 30개국 비준이 이루어져, 2010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2012년 2월 현재 당사국 68개국)

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¹³⁾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CCW 평가회의에서 확산탄 의정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확산탄의 무조건적인 철폐를 주장하는 국가들(오슬로 그룹)과 군사적 필요와 인도적 고려간 균형을 강조하는 주요 확산탄 생산·보유국간 견해차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소형무기(SALW: Small Arms and Light Weapons)의 무분별한 확산 및 불법거래 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거래 방지,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유엔행동계획(UN PoA)¹⁴⁾’ 및 ‘불법 소형무기 식별 및 추적에 관한 국제문서(ITI)¹⁵⁾’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개최된 소형무기 정부전문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차단과 관련한 무기의 표식 및 추적, 국제협력 및 원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 및 불법 거래 차단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성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중이다. 2012년도 7월 개최 예정인 ATT 성안회의에 대비하여 열린 4차례의 준비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기초연설을 시행하는 등 관련 논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고, 7월 성안회의를 위해 제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ATT의 통제대상 및 부과 의무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ATT 성안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13) 동 협약의 정식 명칭은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이다. 우리는 동 협약 및 제1의정서, 개정제2의정서, 제5의정서에 가입중이다.

14) 소형무기 불법거래방지 유엔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to Prevent, Combat and Eradicate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은 2001.7.9-20간 개최된 소형무기 불버버거래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5) 불법소형무기 표지 및 추적에 관한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 to Enable States to Identify and Trace in a Timely and Reliable Manner, Illicit Small Arms and Light Weapons)는 2005년 12월 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4) 유엔 차원에서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 및 성과

2011년도 제66차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는 예년에 이어 핵군축 및 핵비확산,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활성화 방안, 이란·시리아·북한 핵프로그램 등에 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도 주요 국제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였다. 2012년에는 제63차 및 제65차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우리나라 주도 ‘무기 불법중개 활동 방지’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 무기중개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는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와 공동으로 매년 제주 국제군축비확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제10차 회의(11월 7일-8일)에서는 회의 개최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군축비확산 논의를 돌아보고, 핵 및 재래식무기 분야에서의 향후 도전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내년 2012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당면과제와 기대성과에 대해 솔직하고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현황

(2012년 2월 현재)

구분	협약 발효	가입국	남/북한 현황	주요 미가입국 및 기타	
국제 협약	NPT	'68.7. 채택 '70.3. 발효	190개국 가입	한국 75.4 가입 북한 85.12 가입, 03.1 탈퇴선언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등
	CTBT	'96.9. 채택 현재 미발효	153개국 가입 182개국 서명	한국 99.9 가입 북한 미가입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CWC	'93.1. 채택 '97.4. 발효	188개국 가입	한국 97.4. 가입 북한 미가입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등
	BWC	'72.4. 채택 '75.3. 발효	163개국 가입	한국 87.6 가입 북한 87.3 가입	이스라엘 등
	대인지뢰금지협약 (오타와협약)	'99.3. 발효	159개국 가입	남·북한 미가입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CCW 제1의정서 제2의정서 제3의정서 제4의정서 제5의정서	'83.12 발효 '83.12 발효 '98.12 발효 '83.12 발효 '98.7 발효 '06.11 발효	114개국 가입 110개국 가입 97개국 가입 106개국 가입 100개국 가입 75개국 가입	한국 01.5 가입 01.5 가입 01.5 가입 미가입 미가입 08.1 가입	북한 미가입
	CCM	'08.5 채택 '10.8 발효	68개국 가입 43개국 서명	남·북한 미가입	미, 중, 러, 터키, 인도, 이스라엘 등
	국제 기구	IAEA	'56.10. 헌장채택 '57.7. 설립	152개국 가입	한국 57.8 가입 북한 74.6 가입 94.6 탈퇴
CD		'84.2. 설립	65개국 가입	남·북한 96.6 가입	
COPUOS		'59. 설립	70개국 가입	한국 94.9 가입 북한 미가입	이스라엘, 뉴질랜드, 벨라루스 등
수출 통제 체제	NSG	'78.1. 설립	46개국 가입	한국 95.10 가입 북한 미가입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등
	ZC	'74.8. 설립	36개국 가입	한국 95.10 가입 북한 미가입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AG	'85.4. 설립	41개국 가입 (EU 포함)	한국 96.10 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러시아 등
	MTCR	'87.4. 설립	34개국 가입	한국 '01.3 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파키스탄, 인도, 시리아, 이스라엘 등
	WA	'96.7. 설립	41개국 가입	한국 96.7 가입 북한 미가입	벨라루스, 이스라엘, 중국, 인니 등
기타	HCOC	'02.11 설립	130개국 가입	한국 02.11 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PSI	'03.5 설립	98개국 참여중	한국 09.5 정식 참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등

7. 비전통안보 국제협력

1) 대테러 국제협력

(1) 국제 테러 정세와 우리의 대테러 대응 방향

9.11 사건 발생 이후 대표적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대두된 테러는 전 세계 문명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테러 세력들은 마약밀매·인신매매·불법 무기거래 등 초국가적 범죄와의 연계, 첨단 통신기술 악용 등을 통하여 그 수단과 조직을 시시각각 변화시키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등의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적 법집행 강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 체제 확립, 테러자금 조달 방지, 테러 조장 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대테러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테러 행위를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동시에 테러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적으로는 테러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대테러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유엔은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대테러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테러관련 국제협약, 유엔 범세계대테러전략(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및 유엔 안보리와 총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13개 국제협약 중 12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2005년 9월 16일에 서명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유엔 대테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국제테러리즘협약’의 조기 채택을 지지함과 동시에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 및 단체들에 대한 출입국 제한·금융 제재 등에도 동참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11년 제9차 ARF 대테

러·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에서는 ARF 대테러·초국가범죄 작업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2011년 2월, 5월, 9월에 개최된 APEC 대테러대책반(CITTF) 회의를 통해 APEC 대테러·안전무역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동참하였다. 아울러, 2011년 9월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제3차 APEC 사이버안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제25차 APEC 대테러대책반 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우리의 역내 대테러 노력을 홍보하였다.

(3) 양자협력

우리나라는 2011년 중국, 일본, 러시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과 양자 대테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한·중·일간 최초로 3국간 대테러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테러 정보교류 활성화,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시 상호 공조, 사이버공격·해적·마약밀매·인신매매 등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4) 국내 대응체계 정비

연간 1,300만여 명에 달하는 해외 여행객,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 그리고 국군 해외파병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도 해외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정 불안 지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한 견고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테러 취약지역에 주재하는 우리 시설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테러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테러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7월 24일 개정 여권법 시행령을 발효하여 폭동·테러·천재지변 등의 위험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체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¹⁶⁾

이 밖에도, 테러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합동 테러대책협의체를 구축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테러위협 대응체

¹⁶⁾ 여행금지국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5개국(2012년 5월 기준)

제를 마련하고 있다. 동 협의체에서는 2011년 8월 개최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테러 정책을 점검하기도 한다.

2)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참여

(1) 해적 관련 현황

해적문제는 선박의 정상적인 항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 관련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해역을 중심으로 한 해적 사건은 지난 5년간 144건, 작년 한 해만해도 22건이 발생해 5년간 497명, 2011년 1년 동안 78명이 피랍되었다.¹⁷⁾ 또한 2011년 2월 8일 이탈리아의 유조선 SAVINA CAYLYN호(105,000톤) 피랍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적 수법도 점차 조직화·고도화되고 있고, 활동영역 또한 아덴만 일부에서 인도양 남동부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해적행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1년 기준 연간 70억불¹⁸⁾로 추산되고 있다.

(2)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참여

이러한 해적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2008-2009년에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¹⁹⁾, 2009년²⁰⁾, 2010년²¹⁾에 이어, 2011년²²⁾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동 결의에 근거하여 외국 군함이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을 포함한 해적 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연합해군(CMF: Combined Maritime Forces)의 군사

17) <http://gsis.imo.org/Public/PAR/Search.aspx> (2012년 3월 7일 검색)

18) 국제해사기구(IMO) 발간 『Maritime Knowledge Centre』 (2012.03.06) p.23

19) 제1816호(08.06.02) : 해적 퇴치를 위한 외국 정부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승인(6개월간)

제1838호(08.10.07) : 소말리아 인근 공해 해역에 유엔 회원국의 군함·군항공기 파견을 요청

제1846호(08.12.02)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제1851호(08.12.16) :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 (1년간)

20) 제1897호(09.11.25)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연장(1년간)

21) 제1918호(10.04.27) : 각국 국내법에 따른 해적 사법처리 방안 검토

제1950호(10.11.23)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22) 제1976호(11.04.11) : 소말리아 밖 제3국에의 특별법원 및 교도소 설립 고려

제2015호(11.10.24) : 각국 국내법상 해적행위 범죄화 및 기소 촉구, 소말리아 해적 특별법원 설립 논의

제2020호(11.11.22)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작전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제9위의 해운국이자 소말리아 해적 피해국으로서 해적 예방과 퇴치에 핵심적 이해를 갖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 먼저 상기 5개의 안보리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동 결의 제1851호에 의거하여 창설된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군함을 파견, 연합해군(CMF)의 일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2011년에는 6월 서울에서 ‘소말리아 해적자금 차단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선박의 자구책을 논의하는 CGPCS 제3작업반(Working Group 3) 의장국에 진출하는 등 국제 사회의 공조를 주도했다. 또한 CGPCS 공식 웹사이트 구축·운영을 통해 CGPCS 참가국 간 소통 강화 및 일반 대중의 해적퇴치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지부티강령 신탁기금 10만불, 유엔 소말리아 해적퇴치 신탁기금 10만불 및 UNDP 소말리아 법치·안전 프로그램 27만불 등 총 47만불을 기여함으로써 동부아프리카 지역의 대해적 역량강화는 물론 소말리아와 인근국의 사법역량 강화를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공헌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소말리아의 과도 정부가 군벌의 발호로 인해 장기간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정상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단시일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가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기여를 다방면에서 모색해 나갈 것이다.

3)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이버공격에도 큰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2009년 7월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으로 십여만 대의 컴퓨터가 감염되었으며, 2011년 4월에는 농협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1년 8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

터플랜'을 마련하였다. 이 마스터플랜은 △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업무 수행체계를 수립하고 △ 중요자료와 핵심시설에 대한 보안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 범국가적으로 사이버공격을 탐지·차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1월 개최된 '런던 사이버스페이스 총회(London Conference on Cyberspace)'는 60여개국 각료급 인사들과 IT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여 안보·경제·사회·범죄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의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서의 높은 위상과 역량을 평가받아 2013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사이버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 국가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적용가능한 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제2절

개발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
실천

개도국과 선진국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기후변화, 난민, AIDS 등 전 지구적 대응을 요하는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라는 외교목표 아래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질적 발전을 통한 기여외교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11년 11월에는 개발원조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도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정부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증여는 개도국에 상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무상자금 공여이며, 양허성 차관은 상환 의무를 부과하나 조건이 완화된(증여율 25% 이상) 융자이다. 증여는 무상원조로,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로 각각 불리기도 한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 시 채택된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개발분야 목표 이행을 위해 2001년 9월 유엔이 채택
- MDGs는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 목표로, 8개 주요목표, 21개 상세목표 및 60개 달성지표로 구성
- MDGs 8대 목표
 - 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 ②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 ③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 ④ 유아사망률 감소
 - ⑤ 모성보건 증진
 - ⑥ 에이즈 등 질병 퇴치
 - ⑦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 ODA 확대 추진

우리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M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도에 총 13.21억불(이하 잠정통계수치)의 ODA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9.7억불(73.4%),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3.5억불(26.6%)이었고, 양자원조중 무상원조가 5.58억불(57.5%), 유상원조가 4.12억불(42.5%)을 각각 기록하였다.

우리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11년도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

》》》 2008-2011년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백만불, 순지출 기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ODA 총액	802	816	1,174	1,321
양자원조	539	581	901	970
- 무상원조	369	367	574	558
- 유상원조(EDCF)	170	214	327	412
다자원조	263	235	273	351
ODA/GNI	0.09%	0.10%	0.12%	0.12%

*출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 보고

비 ODA 비율은 0.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인 0.31%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원조규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를 0.15%,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목표를 국제사회에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2. ODA 선진화 추진

우리 정부는 2010년 OECD DAC 신규 가입 이래, 우리의 ODA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ODA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무·유상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작성되어, 2010년 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의결된 우리 정부 최초의 ODA 전략보고서

- 개발협력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참여 강화 등 우리 ODA 정책의 3대 선진화 전략 제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유상 통합 중점협력대상국 지정(26개국) 등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기반으로,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작성되어, 2010년 12월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향후 5년(2011~2015)간의 중기 ODA 계획

- 무상원조 및 UN/기타 국제기구 다자협력분야 기본계획은 2011~2015년간의 전략목표, 추진방향, 재원규모 및 운용계획, 원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및 긴급구호 확대,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제시
- 그간 우리 원조 시스템의 문제였던 무상원조의 중복성·분절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협력대상국과 현장 중심의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조 시행에 중점
- 그 동안 예산상 제약으로 우리의 경제력, UN 정규예산 분담률 등 국제적 위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긴급구호 규모를 2015년까지 전체 ODA의 6%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포함

1)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현지 ODA 협의체 구성

우리 정부는 무상원조 시행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분야별 기본계획에 따른 일관된 전략 하에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2010년 11월 구성하였고,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한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도 2010년 10월 설치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 7월 26일 발효) 제9조에 의해 설립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는 2009년 이후 무상원조 지원실적이 있는 기관(부처, 위원회 및 청 단위)이 참여해서 무상원조 사업계획을 협의·조정하고 무상원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2011년에는 두 차례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제2차관 주재) 및 18회의 분과협의회 개최를 통해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 ODA 통합시행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협력대상국 현지에서 여러 ODA 시행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의·조정을 강화하고자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동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ODA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지 ODA 시행기관 관계자들(KOICA 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주재원, KOTRA 등)이 각 기관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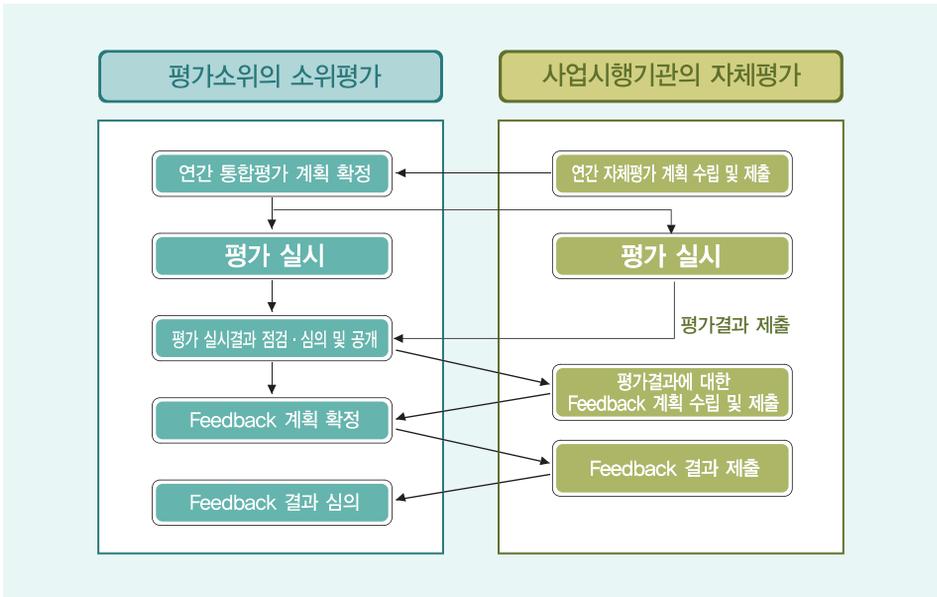
2)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체제 운영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성과측정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무·유상 통합 평가지침을 마련(2009.12)하고, 동 지침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를 2010년에 시범적으로 실시(캄보디아 국별평가, 무·유상 연계사업 효과성 평가, 새마을 운동 전수사업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 방안(2010.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와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의 '소위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며, 독립적인 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3)에서 의결된 통합평가 계획에 따라, 소위평가 3건(△개발컨설팅사업 △주요기관 ODA 추진체계 △ICT 분야 ODA 사업) 및 자

»»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체제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 (기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임에 따라 평가업무 전담
 - 평가소위 주관으로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개별 시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
 - 평가소위는 주요 계획, 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소위의 평가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총 15명 이내
 - 위원장(1) : 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
 - 당연직 위원(5) : 총리실, 재정부, 외교부, KOICA, 수은 국장급
 - 민간위원(9명 이내) :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임기 2년)
- (협조기관) 평가소위의 평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무상) 및 재정부(유상)를 평가협조기관으로 지정
 - 협조기관은 소관분야 각 시행기관의 평가계획,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보고

체평가 21건을 실시하였다. 2011년 무상원조 자체평가는 평가기법 및 이슈 다양화, 평가에 있어 수원국과의 협력 실현, 무상원조 사업의 영향력 평가 시행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자체평가의 수준은 아직 낮은 상황인 바, 추후 평가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2011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향을 2012년 평가에 환류할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 혁신적 개발자원 발굴 노력

국제사회는 일반 정부예산에 기초한 전통적 방식의 ODA를 보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성격의 ‘혁신적 개발자원’ 발굴 논의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6년 2월 프랑스 주도로 ‘혁신적 개발자원 리딩그룹’이 출범하였고, 우리나라는 동 그룹의 일원으로서 제3대 의장국을 역임(2007년 3-9월)하였다. 2007년 9월에는 항공권연대기여금(국내명칭: 국제빈곤퇴치기여금¹⁾)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최빈개도국의 질병과 빈곤퇴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질병퇴치 분야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HIV/AIDS·결핵·말라리아 3대 질병 치료에 기여하고 있으며, 오랜 현장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리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질병퇴치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국내에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하였다.

혁신적 개발자원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1년 9월에는 제66차 UN총회 계기에 개최된 혁신적 개발자원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혁신적 개발자원 도입·운용을 통한 ODA 선진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혁신적 개발자원 교육분야 T/F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혁신적 개발자원 논의의 지평을 보건분야에서 교육분야로 넓히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1) 출국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모금되는 재원을 개도국의 질병 및 빈곤 퇴치 목적으로 활용하는 ‘항공권연대기여금’의 국내명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매당 1,000원의 기여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석/비즈니스석/일등석간 적게는 1유로 많게는 40유로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3. 국제개발협력 규범 형성에 있어 선도적 역할 수행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부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²⁾(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한국의 DAC 가입은 최빈개도국으로서 원조를 받던 국가가 선진 원조 공여국 협의체에 가입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이는 그간 ODA분야에서 우리의 확대된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선진 공여국으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개발 원조를 질적, 양적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 국제개발협력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부응해야 한다.

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발협력 분야 최대 규모·최고 권위를 가진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주최하였다. 부산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개발경험에 입각한 ‘효과적 개발’ 의제를 주도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산총회 개회사

(1) 부산 세계원조총회 성과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결집

부산총회에는 전 세계 16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s:

²⁾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90%를 담당하는 선진 공여국 포럼으로 국제사회의 원조규범 제정, 원조정책 조정, ODA 자원 확대 및 원조 효과성 제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DAC에서 수립되는 원조 규범이나 지침 등은 회원국들의 원조 시행과정에서 중요한 준거가 된다.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재확인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부산총회는 UN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시한을 4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결집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괄적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 '부산 파트너십' 출범

부산총회 참석자들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결과문서로 채택하고, 모든 개발주체를 포용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출범시켰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은 선진공여국과 수원국 중심의 기존 개발협력의 틀을 확대하여,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그 활동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emerging economies)과 민간, 시민사회 등 새로운 개발주체들을 모두 포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부산총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인 참가자들

특히, 국제경제에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남남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이 결과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이 출범하게 되었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은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장점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의 목표와 원칙하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개발협력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조 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로의 패러다임 확대

부산총회 결과문서는 개발을 위해서는 원조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전통적인 남북협력을 넘어 다양한 개발주체 및 협력방식을 인정하고, 이러한 개발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약을 담았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남남/삼각협력과 민간분야의 역

할을 인정하고, 반부패 및 불법재원 흐름 방지와 기후변화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강조하였다.

2005년 파리 원조 효과성 선언이후 국제 개발협력 커뮤니티의 논의는 원조 전달과정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부산총회를 계기로 원조이외의 다양한 자원, 협력방식, 여타 정책과의 조화 문제 등 개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다루는 보다 포괄적인 패러다임이 마련되었다.

포스트 부산 이행체제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

부산총회 참석자들은 결과문서 합의사항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포스트 부산 이행체제에 관한 기본 틀에 합의하였다. 무엇보다 수원국 현장 중심으로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OECD와 UNDP 간 협력 하에 가벼운 거버넌스 체제(country heavy, global light)로 전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출범시켜,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기로 하고,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2012년 6월까지 결정기로 하였다.

(2) 우리 정부의 역할과 이에 대한 평가

행사 기획 및 운영, 결과문서 도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정부는 행사 주관자로서 부산총회 준비, 운영,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였다. 우선, 외교통상부 산하에 부산총회 준비기획단(단장 : 홍성화 대사)을 설치하여 행사 및 의전 사항을 담당하게 하고, 회의 의제 및 결과문서 문안 협상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이 담당하였다.

이번 총회는 참석인원이 2008년 가나 아크라 회의(1,700여명)에 비해 대폭 늘어 3,000여명에 달했고, 본회의 외에도 40여개의 부대행사, 각종 포럼, 혁신과 지식 나눔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전체적인 회의 기획 및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는 부산총회 실질적 논의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과 주OECD대표부를 중심으로 지난 1년여 동안 회의 실질사항에 관한 논의

에 적극 참여하여, 포괄적인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도출, 여성이슈의 의제화, Post 부산 체제에 대한 합의 형성 등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리는 결과문서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설득과 교섭을 통해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대한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승인을 이끌어냄으로써, 기존 선진 공여국과 신흥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개발경험의 국제적 소개와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 제고

또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입각하여 '효과적 개발' 의제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의 주요 동인인 효과적 제도, 민간기업 기여, 여성 역량 강화 등의 요소를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개도국 개발 비전의 상징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킴으로써 '글로벌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통해 부산총회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시 G20 개발의제 도입에 이어 주요 국제 어젠다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과 역량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 G20 개발의제의 차질 없는 이행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G20 개발의제(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 채택을 주도한 이래, 다년간 행동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G2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해 설치된 G20 개발그룹의 공동의장국(공동의장: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3차례의 G20 개발그룹회의(3월, 7월, 9월)와 G20 개발·재무장관회의(9월)를 개최하여 다년간 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간느 정상회의에 제출할 G20 개발의제 성과물을 도출하였다. 2011년의 개발의제 논의는 다년간 행동계획에 따라 개도국 성장에 핵심이 되는 9개 분야의 성장 장애요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G20 간느 정상회의 시 정상 앞으로 제출된 G20 개발그룹 보고서에는 이러한 성장 장애요인 규명과 더불어 장애요인 해소 권고방안(「식량가격의 불안정성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 및 「인프라 관련 고위급 패널 권고안」, 「다자개발은행

행동계획」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및 개발경험공유 분야의 공동조정국으로서, 다년간 행동계획 이행을 위임받은 관련 국제기구 및 여타 공동조정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1년 성과물 도출, 다년간 행동계획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아울러, 우리는 G20 개발그룹회의 계기 부산총회 아웃리치 행사 및 부산총회 계기 G20 개발의제 아웃리치 행사를 번갈아 개최함으로써 G20 개발의제와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말 차년도 G20 의장국인 멕시코는 우리 정부가 2012년에도 G20 개발그룹 공동의장국을 수임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정부는 G20 개발의제에 있어 우리의 리더십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을 통한 대개도국 지원 확대

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 확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1991년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출범하여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꾸준한 무상원조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4억8백만불(잠정)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페루 의료서비스 활동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빈지역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오세아니아 및 중동 포함)에 대해서는 전체 양자 지원액의 50.9%에 해당되는 2억7백90만불을 지원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천명한 이래 2005년 1,572만불에서 2011년 8,820만불(잠정)로 원조 규모를 약 5.6배 정도로 확대하였다. 2010

년 10월 개최된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6개 무·유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양자 간 무상원조의 70% 이상을 이들 중점협력국에 지원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08년 7월 G8 정상회의 시 2008-2012년간 총 2천억원 규모의 ODA 사업을 지원하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20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 400억원, 2011년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 취약국가 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

(1) 이라크 재건지원

우리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3-2007년간 총 2.6억불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며, 2007년 5월 개최된 ‘이라크 재건회의(ICI: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시 2008-2011년간 총 2억불(무·유상 각 1억불) 추가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라크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10-2014)’ 및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고려, 보건의료와 교육(기초교육, 직업훈련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 지원중이며, 연수생 초청 등과 같은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 및 이라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 확충 및 교과과정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아프가니스탄 평화구축 지원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1-2011년간 약 2억불 규모의 무상원조(군·경 기금에 대한 기여 제외)를 지원해 왔으며, 2008년 6월 파리 아프간 원조공여국회의 및 2011년 4월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외교장관회의에 참가하여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운영해 오던 한국 병원을 한국의료직업훈련팀으로 확대하여 2011년도 기준 매일 약 17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진료혜택을 제공하는 등 개원 이후 2011년까지 총 78,929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2011년도 기준 월 평균 3,000명의 민간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의 독자적 기지 구축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우리 PRT가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PRT 기지 내 경찰훈련센터, 교육문화센터, 병원이 개원되어 아프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 PRT는 2012년에도 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거버넌스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재건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프간 평화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팔레스타인 재건 지원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개발과 안정을 지원하고 중동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1991-2011년간 약 3,400만불의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수반 방한 시 2011-2015년간 2천만불의 무상원조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지원 약속에 따라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교육·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교육시스템 개선사업 및 IT 직업 훈련센터·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팔레스타인의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및 전문가 약 300여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기술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 재건 및 복구가 항구적인 중동 평화 달성의 관건임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대팔레스타인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3) 아프리카 개발협력

아프리카는 아시아에 이어 우리의 중요한 협력대상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발전 및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

라 2008년 기준 대아프리카 ODA 지원규모는 2005년 대비 약 2.5배 확대된 1억불, 무상 원조는 약 4배 확대된 73.5백만불에 이르렀다.

또한 200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계기에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ODA 지원규모를 2012년까지 2008년 지원실적 대비 2배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 구상 2009-2012’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기본 구상에 따라 2012년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는 약 2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 연수생 5천명을 초청하고, 해외봉사단(WFK: World Friends Korea) 1천명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4)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통합 파견

우리 정부는 2009년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의 국가대표성 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 파견을 위해 통합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를 출범시켰다. 2010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 및 중장기자문단,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봉사단 및 과학기술자문단, 행정안전부의 IT 청년봉사단, 지식경제부의 퇴직전문가 사업 등 총 4개 부처 6개 사업예산을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 4,397명의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이 해외로 파견되었으며, 2012년에는 4,113명의 봉사단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전략적 다자개발협력체제 구축 및 이행

우리 정부는 양자원조와 함께 개발협력의 한 축으로서 다자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빈곤·기아 등 범지구적 개발과제에 대처하며 각종 분쟁 및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등 양자 원조 추진에 제약이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자 개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등 주요 개발기구에 대한 기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UNDP와의 협력 관련, 2010년 개소된 ‘UNDP 서울정책센터’가 부산 총회 계기에 ‘민간협력포럼’을 개최(2011.11)하고 ‘인간개발보고서 발간기념행사’를 개최(2011.12)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우리의 개발경험을 유엔시스템을 통해 개도국과 공유하는 지식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UNDP와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에 설치된 ‘한·UNDP MDG 신탁기금’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채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아울러, 2012-2014년간 UNDP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유엔 개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기여를 높이고 있다.

WFP의 경우, 2010년 4월 ECOSOC 조직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WFP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11-12년간 우리 정부의 인도지원 분야 중점 협력 대상기구인 WFP의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농촌 인프라 건설 활동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에게 식량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WFP의 기존 사업(Food-for-Work)에 우리 새마을 운동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농촌 개발 사업인 「Food-for-New Village」사업을 추진, 시범 대상국으로 네팔과 르완다에 각각 100만불을 지원키로 하였다.

UNICEF와는 2009년 체결된 한·UNICEF 기본협정에 따라 인도적 지원 및 개발 분야에 있어 협력관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동과 여성의 생존권 보장에 주력하는 UNICEF를 통해 2010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 기초면역 강화사업 및 방글라데시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09-11년에 이어 2012-14년간에도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며 UNICEF의 정책수립 및 운영방향 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다자개발기구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s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에 2009년 12월 가입한 이래 동 네트워크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선진 평가기법을 대내적으로 공유하고 다자개발기구 성과평가결과를 우리의 다자원조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 강화

우리 정부는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소와 피해자들의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 3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제공하



일본 지진·해일 당시 피해가 가장 큰 센다이 가모지구에 투입되어 수색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구조대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2010.5.28)’,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10.25)’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활동 확대 및 해외긴급구호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10년 5월에 마련된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 5월에는 군 수송기를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2011년 7월에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설치·운영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 등 여타 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2008년 미얀마 사이클론,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09년 중동 가자사태, 2010년 아이티 지진, 칠레 지진, 2011년 일본 지진, 리비아 사태 등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난에 대해 긴급구호대 파견, 구호품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구호를 제공하였다.

한편,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의 성과로 2011년 11월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외부 등급 분류(IEC)에서 ‘Heavy(상급) 등급’을 획득하여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구호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선진 구호 장비(이동식 병원 등)를 확충하고, ARF 재난구호훈련(DiREx)을 공동 개최하는 등 재난 구호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기여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분야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6. 향후 과제

전후 독립한 국가로는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는 수혜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요청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등 원조의 질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G20 개발의제, 부산총회 후속조치 등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적극 주도함으로써 기여외교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1. 개관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문화외교가 외교력의 새로운 축으로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공공외교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새로운 외교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2010년 ‘한국 공공외교 포럼’을 출범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하였고, 2012년에는 ‘문화외교 정책과’를 ‘공공외교정책과’로 개칭하는 등 공공외교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유네스코 등 문화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민간법인·단체 해외활동 지원 등 지자체와 민간의 외교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와 매10주년 단위로 외교관계수립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에는 20개국과 외교관계 수립기념의 해를 맞아 다양한 종합 외교행사를 개최하여 한국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아울러 교류가 미진한 지역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교류사업과 함께 공연, 전시회, 영화제 등 각종 해외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국가간 우호증진에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또한 90년대 후반 드라마, 영화로 시작된 한류의 인기가 최근 K-POP으로 더욱 심화되면서 외교통상부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 더욱 기여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2011년 롯데그룹 등 민간기업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재외공관에서는 한식행사, 한국영화제 등을 개최하고 재외공관청사 및 관저에 우리의 우수한 예술품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는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가 큰 스포츠외교에 중점을 두어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11년 대형 국제스포츠대회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국가 브랜드를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1) 공공외교 강화

오늘날 외교는 수행 주체와 대상이 정부 중심에서 시민사회, NGO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민간 주체로 확대되었고, 외교 수단도 정치, 안보, 경제 등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문화와 가치, 국가브랜드 이미지 등 소프트 파워적인 요소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외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외교통상부는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 즉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추진하고 이를 정무, 경제외교와 함께 외교의 세 번째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2010년을 공공외교 추진 원년으로 삼고, 우리의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와 담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5월17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과 공동으로 '공공외교 포럼'을 공식 출범하였다. '공공외교포럼'은 학술, 언론, 사회, 문화, 경제 등 각계 공공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민간 자문기구로서, 한국

의 공공외교 전략 및 거버넌스 구축 등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고, 정례 간담회,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 공공외교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9월 7일에는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한 데 이어, 2012년 1월 20일 ‘문화외교 정책과’를 ‘공공외교정책과’로 개칭하는 등 공공외교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조성해 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공공외교 관련 국제포럼, 세미나, 간담회 개최 및 연구 과제 수행 등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 전략을 개발하고 공공외교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2) 대유네스코 외교 강화

외교통상부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주요 정책의 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과학 분야 전문가인 유네스코를 통한 이슈 형성과 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6개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 500여 만불 규모의 신탁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 교육, 인문 및 사회과학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및 정보 교환에 보다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7-2011년에 이어 2011-2015년 임기의 집행이사국에 재선출 되었다.

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기록유산 및 무형유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우리 유산 보호뿐 아니라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5월에는 ‘일성록’과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11월에는 ‘한산모시짜기’, ‘택견’, ‘줄타기’가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1999년 이래로 주프랑스대사관이 겸임하여 오던 주유네스코 상주대표부를 2009년 독립대표부로 재개설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독립대사가 부임하는 등 우리의 대유네스코 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는 문화 분야에서 국제규범형성을 주도하는 유네스코에 대한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문화영향력을 확대하고 선진문화강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3)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외교통상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해외문화교류 및 지자체의 성공적인 국제행사 유치 등을 통해 외국 정부와 우호협력 관계를 증대하고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지자체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가 외국과 체결한 자매결연·우호교류의 수가 1,100여 건에 달하는 등 지자체의 국제화 추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매도시간 문화, 예술분야 협력 외에도 청소년, 체육교류 등 교류 활동 분야도 다각화 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와 '외교부-강원도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국제활동에 대한 양자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또한 풍부한 국제감각과 경험을 가진 외교통상부 출신 인사들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제관계자문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문대사들은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수출증대 및 대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 기관들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지자체의 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4)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지원

외교통상부는 해외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을 외교통상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로 허가,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외교통상부에는 총 662개(비영리법인 523개, 비영리민간단체 139개)의 비영리 법인·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79개(비영리법인 53개, 민간단체 26개)가 2011년에 신규로 등록되었다.

외교통상부는 2011년 12월에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전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외교단체 사이버커뮤니티 구축 사업 등 민관뿐 아니라 민간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역량을 응집하여 공공외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5) 재외예술인 활용 문화외교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중인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하여 재외공관에서 공연, 전시 등 문화 활동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문화사절단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공관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문화행사 개최가 가능해짐으로써 이전보다 많은 수의 공관에서 클래식, 퓨전국악, 전통·현대무용, 회화 및 사진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공연단 파견이 쉽지 않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도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문화외교의 지리적 입지가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동 사업을 통해 2010년에는 칠레, 에콰도르, 세네갈, 스페인 등 26개 공관에서 총 37차례, 2011년에는 프랑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30개 공관에서 33차례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재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널리 홍보하였다.

3. 문화를 통한 국가간 소통 강화

1) 외교관계수립기념 문화행사 개최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와 매10주년 단위로 외교관계수립기념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1년에는 한·레바논 수교 30주년, 한·카메룬 수교 50주년, 한·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수교 20주년, 한·벨기에 110주년, 한·그리스, 포르투갈 50주년 등 20개국이 외교관계 수립 기념의 해를 맞아 다양한 종합외교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레바논 수교 30주년 및 한·카메룬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는 사물놀이와 비보이 공연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역동적이고도 다이내믹한 문화를 소개하였다. 또한 한·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는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국 고유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퓨전국악팀을 파견하여 양국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스에서는 한·그리스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우호친선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의 태권도 시범 및 사물놀이 공연에 이어 우호친선 날 행사에 참가한 정부

주요인사 및 일반인들을 포함 2,000명에게 잡채, 불고기, 김밥 등 한식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수교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양 국민들간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 동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여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카메룬 수교 50주년 기념 노름마치 및 고릴라크루 공연 - 우리 국악(아리랑)에 맞춰 한국과 카메룬 비보이팀의 비보이 배틀 (2011.6.24, 카메룬 Palais des Congres)

2)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국가간 문화교류는 다양한 국가의 국민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핵심요소이다. 문화적 소통과 나눔이 국가간 언어 장벽, 인종 차이, 지리적 원격성 등의 장애물을 허물어 서로의 정서적 유대감을 한층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한류확산 추세에 맞추어 타문화를 포용하고 공유해 나가는 ‘쌍방향문화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외교통상부는 2006년부터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아랍, 흑해 등 우리와 문화교류가 다소 미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아프리카문화축제 포스터 및 공연사진 (2011.6.31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음”)

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13만여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타국의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 영화상영, 미술전시회 등을 관람함으로써 타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3)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 운영

외교통상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 하에 양자 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각국과 문화교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콜롬비아(6월), 중국(11월), 몽골(11월), 칠레(11월), 브라질(11월), 아르헨티나(11월), 에콰도르(11월) 등과 문화공동위 혹은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문화교류 전반에 걸친 현안과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4) 동북아 문화협력(한중일 문화서틀사업)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은 2007년 6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시 미래지향적 우호친선 관계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여 정례적으로 3국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중·일 문화서틀사업에 합의하였다.

상기 합의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2007년부터 영화제, 유물전, 청소년 축제 등 매년 한·중·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다. 2011년에는 7월 30일에서 8월 27일간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그리움, 동아시아 현대미술전'을 개최하였다. 한·중·일 신진 및 중견 작가 12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동아시아 공통의 정서인 그리움을 통해 3국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동 사업을 진정한 의미의 '서틀'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에는 중국에서, 2013년에는 일본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교통상부는 한·중·일간 활발한 문화교류와 우호친선 분위기가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3국간 문화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5) 한류 확산

90년대 후반 시작된 한류는 드라마, 영화의 인기에 이어 최근 K-Pop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보다 심화되고 있다. 우리 대중문화의 확산은 국가브랜드와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어 한류 확산을 지속시키는 것은 공공외교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및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민간기업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롯데그룹과 영화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2011.9.6). 동 양해각서는 '재외공관 한국 영화 상영행사'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가 시행하는 국내외 문화외교사업의 공동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글로벌 문화외교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체제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국가브랜드 가치 고양

1) 한식세계화에 대한 재외공관의 기여 확대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한식세계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각종 행사개최를 통해 우리의 음식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전체적인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뿐 아니라 한식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해외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식세계화사업 추진은 한식에 대한 폭넓은 인식 확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1년도 70여개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외교단 및 정치, 경제, 문화 분야 주요 인사들 대상으로 한식을 제공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김치·비빔밥 등의 한식을 만드는 등 각종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한식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유명 백화점·특급 호텔의 협력을 통해 호텔 뷔페식당의 주요메뉴로 한식이 포함되도록 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2) 스포츠 외교

외교통상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 친선의 증진과 함께 국가브랜드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가 큰 국제스포츠포츠대회 유치에 스포츠 외교의 중점을 두고 있는데, 2011년에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번의 실패를 딛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태권도는 K-POP, 드라마 등 신한류와 연계된 콘텐츠로서 세계 각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등과 협력하여 매년 태권도 시범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17개국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이집트, 코스타리카 등 16개 재외공관에서는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의 확산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등 27개 재외공관에 공립학교 태권도 지도, 각종 태권도 대회 및 태권도 용품 지원, 태권도 관련 워크숍, 학술연구 지원 등 다방면으로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영상물(영화, 드라마 등)의 해외진출 지원

외교통상부는 한류로서 파급력이 큰 드라마의 해외방영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등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 대상으로 우리 드라마가 방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내조의 여왕>, <아가씨를 부탁해> 등의 드라마를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보급하기 위해 스페인어 및 불어 더빙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2011년 약 70여개 재외공관에서 한국영화 상영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다양한 한국영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데 기여하였다. 베를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국제영화제에 국내영화 출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영화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4)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우리의 우수한 전통 및 현대예술품을 전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08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Art Bank) 미술품 임차지원, 2009년부터 문화재

청과의 협조 하에 전통공예품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예술성 있는 작품을 해외 공관에 다수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20개 공관에 미술품 94점을 지원하였으며 이스탄불, 독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관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에서 임대된 미술품 34점의 임대기간 연장을 지원하여 재외공관을 찾는 해외 방문객들이 그림, 도자기 등 우리나라의 우수 예술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5)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및 한국어 보급

외교통상부는 산하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을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국전문가(知韓인사)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대학의 교수직 설치, 객원교수 파견, 한국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펠로십 등 연구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어 및 한국학 기반확대를 위해 50개국 87개 대학에 91건의 교수직 설치 및 강좌를 운영하고, 22개국 52개처에 56건의 한국학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해외 한국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21개국의 한국전공 대학원생 및 한국어 교원 35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어연수를 지원하였으며 49명의 한국학자와 전문가를 18개국에 파견하여 한국 관련 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10개 개발도상국 외교관 13명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한국어언어문화연수를 시행하였고, 해외 17개국에서 한국전공 대학원생 16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밖에도 3건의 한국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11개국의 한국학 교육자 대상으로 국내 및 현지에서 3건의 한국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대외관계가 확대되고 복잡해 짐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준칙이 되는 국제법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국위가 신장되고 외교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대외정책을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교정책의 합법성·정당성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금년중 다양한 분야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을 통해 외교정책 수립시 정당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법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국제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고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주창되고 있는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이익을 국제법이라는 틀 안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1. 2011년도 조약 체결

1948년 정부수립 후 2011년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2,808건(양자 2,199건, 다자 609건)이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3년간 발효한 조약이 126건(양자 88건, 다자 38건)에 불과한 반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효한 조약은 873건(양자 702건, 다자 171건)에 달한다.

▶▶▶ 정부수립 이후 조약 발효 건수 추세

(2011.12.31 현재 발효기준)

연도	'48-'60	'61-'70	'71-'80	'81-'90	'91-'00	'01-'11	소계
양자조약	88	231	329	326	523	702	2,199
다자조약	38	62	90	112	136	171	609
총계	126	293	419	438	659	873	2,808

2011년에는 양자조약 54건과 다자조약 9건, 총 63건의 조약이 발효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8월 발효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자원부국인 페루와의 에너지·자원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한·콩고공화국 투자보장협정」, 「한·우루과이 투자보장협정」이 발효함으로써 양국 간의 투자협력을 증진하고 콩고공화국 및 우루과이에서의 우리나라 투자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와 원자력 협력협정이 발효하여 이들 국가와의 원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더하여 덴마크, 인도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



| 한·인도 원자력협력협정 서명식 (2011.7.25, 서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었으며, 「한·스페인 지방선거참여권 상호인정 교환각서」가 발효되어 우리 국민의 해외 참정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도국과의 협력분야에서는 「한·에티오피아 무상원조기본협정」과 「한·파라과이 무상원조기본협정」이 서명·발효하여 양자차원의 무상원조 기반이 강화되었고, 볼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말리, 탄자니아, 모잠비크, 세네갈, 필리핀, 니카라과, 몽골 등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 협정 및 약정이 각각 서명·발효함으로써 유상원조의 효과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공조 분야의 경우 「한·캄보디아 범죄인인도협정」이 2011년 10월에 발효함으로써 형사사건과 관련한 양국 간의 사법공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규범형성에 적극 동참하였다. 우선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별도의 양자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다른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가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남동대서양수산자원보존관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동참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우리 어선의 보다 안정적인 조업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국, 일본과 「한·중·일 협력사무국 설립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3국간 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제법적 기여

대외정책이나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대책을 국제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외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선진 일류 국가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그 어느때보다 국제법에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2011년 1월 발생한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 및 이의 처리와 관련한 국제법적인 검토를 포함, 북한의 GPS 교란전파 발사, 일본총리의 A급 전범 발언, 일

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리비아 사태 관련 정부 승인 문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규정 문제, 어업협정 이행 및 한반도 주변 불법조업 등 주요 외교사안 제반 분야의 이슈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외교정책 결정이 국제법에 기반하여 타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의 참여

우리나라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유엔 총회 제 6위원회,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Hague Conference)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 국제법률기구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법 제반 분야에 걸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회의의 성과에 공헌하였다.

우선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0차 당사국 총회서 일본 및 사모아와 함께 아태지역 이사국으로 재선되었다.

2011년 6월 개최된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UNCITRAL 규범 보급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를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금년 제66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¹⁾선거에서는 우리측 인사(박기갑 고려대 국제법 교수)가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향후 ILC를 통해 국제법의 발전 및 법전화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¹⁾ 2012년부터 2016년간 임기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회위원²⁾,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실무 작업반 의장, 유엔총회 제6위원회 부의장 등을 우리나라 인사가 수행하는 등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는 故 박춘호 국적재판관이 배출된 이후, 지금은 백진현 재판관이 활동중이며, 2002년부터 김두영 사무차장이 재임하면서 재판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재판소의 발전과 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극지 환경보호 및 과학연구 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반영하여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에 아산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쇠빙선 아라온(ARAON)호를 운항하는 등 극지 관련 연구 및 탐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극 관련 정부간 포럼에 해당하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정식 옵저버 가입을 목표로 2011년 5월 그린란드(Greenland)에서 개최된 제7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를 포함,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2011년 6월 개최된 제34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우리대표단은 주요국 대표들과 접촉하여, 장보고 기지 건설 및 운영시 우리의 환경 보호 노력을 설명하여 대다수 국가로부터 장보고기지 건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다.

4.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교섭

우리나라는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한 이래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해, 남해, 동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 및 중국과 각각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일본과는 2010년 6월에 제11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중국과는 2011년 8월, 11월, 12월에 과장급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경계획정 회담 추진을 위한 사전 논의를 하였다.

²⁾ 우리 정부는 ICAO 이사국으로 2010년부터 2013년간 임기로 활동중

5.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및 민간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6월에는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국제관계업무 담당자를, 12월에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수시로 재외공관 파견대상 주재관·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담당자 및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해외 저명학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국제법 역량을 홍보하고자 6월에는 한·중·일 및 미국, 호주 등의 국제법학자 등을 초청하여 ‘국제법 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과 11월에는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3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제11회 논문 경시대회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제법 동향과 실무’라는 계간지를 발간하여 국제법 관련 주요 문서, 국제사법기구의 최신 판결, 조약체결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조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도 및 2010년도 ‘양자조약집’, ‘다자조약개황’ 및 ‘알기쉬운 국제법률기구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학자, 법률전문가 및 대학생을 포함하는 민간부문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